

남해안글로벌해양관광벨트 구축에 정부가 화답할 때

아침을 열며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일찍이 1980년대부터 지구촌은 국가·지역적으로 성장동력산업이 '블루벨트'인 제조업에서 '선벨트'인 관광산업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중해, 카리브해 등 해양관광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쟁적으로 해양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윽고 관광산업의 세계 GDP 비중이 10%대에 이르고, 전 세계 신규 일자리 4분의1이 관광분야에서 창출됐다. 관광사업체 80%가 중소기업으로 여성, 청년, 농촌지역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UNWTO) 현재는 관광산업이 성장동력산업인 나라가 가장 많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1990년 후반부터 역대 정권마다 남해안 대상 관광개발사업을 국책프로젝트로 제시했으나, 추진실적은 미흡했다. 김대중정부 때 1998년 최초로 남해안에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남해안국제관광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참여정부 때는 해상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가능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해안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이명박정부 때는 남해안을 '제2의 국토성장축'으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비전 하에 100조원 예산의 '남해안선벨트' 프로젝트를 내놓았으나, 부산·경남권 일부 사업만 추진되고, 전남권은 거의 추진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동 기간동안 태국, 베트남 등 동

남아 제국과 대만, 일본 등은 관광·레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해 왔으나, 우리만 손놓고 있다가 남해안관광벨트가 제안된 지 20여년만에 선을 보였다. 그것도 정부가 아닌 전남도가 민선 7기 도정 목표로 '블루 이코노미'를 설정하고, '남해안성장관광벨트' 프로젝트를 '블루투어' 브랜드로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경남도, 부산시가 참여했으며, 지난 해 12월부터는 전남도 주도로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남해안글로벌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상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남해안은 이른바 '블루오션(Blue Ocean)' 동북아 관광거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해양·도서자원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어 남해안을 빼고는 해양관광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남해안은 중국과 일본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 지근거리(목포-상해 591km, 인천-상해 819km)라는 장점 때문에 중국과 일본 해외관광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외관광객은 1978년 불과 18만여명에서 2018년에는 1억5000만여명으로 급증했으며, 세계적 경제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와 남·북으로 연결해 있는 절강성浙江省과 강소성江蘇省은 지정학적 이점 외에도 인구규모가 크고(1억 3000여만명), 소득수준도 중국 내 최상위수준이어서 남해안관광의 타겟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 후반부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시작해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산도 당초보다 4배 정도 증액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위에 전남과 경남도는 금년 각각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

비엔날레, 하동 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여수시를 비롯한 남중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 이어서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글로벌 이벤트들을 3개 시·도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광역적으로 남해안 프로젝트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해안이 동북아 해양 관광·휴양 거점을 넘어서서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 확신하고 기원한다.

때마침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팝이방탄소년단(BTS)이라는 세계적 히트상품을 키워냈듯이 K관광도 뉴노멀 트렌드에 걸맞게 남해안글로벌해양벨트를 통해 성공 스토리를 써야 한다. 동시에 지방에서는 전남과 남해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6억여명의 동남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남해안 개발 주체를 누구를 할 것이냐인데,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남해안개발에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등 최소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이들 부처가 공동으로 가칭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해 직접 SOC와 관광, 레저, 치유, 휴양, 수산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실천적인 제안이라 생각되며, 정부가 화답할 차례인 듯하다. 1968년 지중해변에 세계 최조이자 최대 규모로 조성된 프랑스 '랑독루시옹' 해양레저단지(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의 '국토균형개발청(DATAR)'을 통해 추진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시점이다.

社說

나주시와 난방공사 원만한 협의 기대한다

항소 취하 법적 다툼 마무리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수년간 진행한 소송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폐기물이 품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자"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난방공사와 나주시간

발전소 사업 개시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 지난해 6월 난방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한 열병합발전소는 시험 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지역사회 반발이 겹쳐 수년간 진행된 법적 다툼이 난방공사의 승리로 종결된 셈이다. 발전소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지만 지자체와 업체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만만찮아 보인다. 양측은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지난 2월 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난방공사는 시설 정상 가동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남은 현안을 조기에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논의 필요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학비연대 31일 총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 등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1차 파업까지 했지만 사측이 노사협의의 조차 거부해 다시 파업에 나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파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무 환경이 건강한 학교와 행복한 학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은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개선,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 돌봄, 업무지원 등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본급은 현재 186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마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얼마 전에는 '급식실 폐업'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차별에 울고 산업재해로 죽어간다'는 이들의 절규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모두 20차례 진행한 집단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한다. 과도한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공무원위원회 의 권고도 무시했다. 중장기 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물론이고 대화 조차도 전면 거부했다. 취재를 막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도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며 차례를 제외하고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해왔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회의 무관심 탓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학비연대와 공존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걸음이 임금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특정 직군의 희생을 담보로 지탱되는 학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학교의 시작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20여년 전 경찰서 출입기자 때의 일이다.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대생이 회복되길 바랐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했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았음에도 여대생이 숨진 이유는 바로 고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때문이었다. 이 농약은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제초효과를 가졌지만, 고독성의 파라쿼트 성분이 함유돼 사람이 마셨을 경우 폐·신장 등 각종 장기를 섬유화시켜 빠른 시간 안에 사망케 한다.

2010년에만 3206명이 그라목손 탓에 숨지는 등 자살 수단으로 악용돼 '죽음의 농약'으로 불렸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12년 그라목손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생산을 금지시켰다. 그라목손이 퇴출된 뒤 농약 중독 자살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살예방 대책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살을 막을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자살 수단만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강 투신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도 없애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를 모두 없애라' 등 조롱 섞인 반응이 대다수다. 복지부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총동적인 자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번개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번개탄 자살로 골머리를 앓던 홍콩에서는 번개탄을 진열대에서 치우고 손님이 요구할 때만 판매하고, 구입자 연락처를 기록하게 해 자살률을 감소시켰다. 전문가들은 농약 '그라목손' 퇴출 사례를 들며 자살수단의 치명성을 낮추는 정책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번개탄 생산 금지'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 가족, 주변인,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제주에서 번개탄과 소주를 주문한 손님의 안색을 수상히 여긴 퀵서비스 배달원의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살 예방의 첫걸음은 '따뜻한 관심'이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자.

번개탄 생산 금지

박성원 편집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